

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102호 2022. 7. 27. (수)

공 포

조례 제1546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조례 제154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5
조례 제154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조례 제1549호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조례 제1550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조례 제155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17
조례 제15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23
조례 제1553호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규칙 제972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6
규칙 제97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29
규칙 제974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0

발 령

훈령 제34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	---47
----------	-----------------------------	-------

공 고

제2022-83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54
제2022-84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58
제2022-843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1

공 람										
--------	--	--	--	--	--	--	--	--	--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546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장 및 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국장, 실장·담당관·과장의”를 “국장, 실장·과장의”로 하며, “실·담당관·과의”를 “실·과의”로 한다.

제3조 “실·담당관·국의”를 “ 실·국의”로 하며, “ 기획감사실, 소통담당관, 총무국, 복지교육국,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을”을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국, 복지교육국,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을”로 한다.

제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공갈등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협치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4(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은 북구청장 직속으로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2. 장기발전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3. 미래형 융·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4. 공보·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7호 “청사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5조제2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산관리 업무 총괄 및 행정전산화 추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장, 담당관·실·과장"을 "국장, 실·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소통담당관"을 각각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담당관·과·보건소·동"을 "실·과·보건소·동"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실장, 담당관, 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실·담당관·과"를 "실·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가목 서식 중 "실장·담당관·과장실"을 "실·과장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서식 중 "국장실, 실·담당관·과장실"을 "국장실, 실·과장실"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행정지원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중 "청사관리업무 담당 과장"을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청사관리업무 담당 주사"를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장,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가목 서식 중 바)재난수습홍보반 "소통담당관"을 "미래전략실"로 하고, 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소통담당관"을 "행정지원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서식 라)행정지원팀(1명) "소통담당관"을 "행정지원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서식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소통담당관"을 "자원순환과"로 하고, 바) 재난수습 홍보반 "소통담당관"을 "미래전략실"로 하며,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소통담당관"을 "행정지원과"로 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우리 구의 장기발전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미래전략실을 신설하고 분장사무 정비(제3조, 제4조의4)

나.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정비(제4조)

다. 총무국 분장사무 정비(제5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54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총무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신고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6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이의신청 등) 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 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을 지급함 (대상자 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함)
		이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 안 내 >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 상 금 결 정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처리일자		년	월	일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제·개정(폐지) 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운용 관련 조례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제1조)
- 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의 예산 신청(제3조)
- 다. 위원회 명칭 변경(제5조)
- 라.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관련 조항 신설(14조~제17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54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23호, 2022. 3. 18.)의 일부개정으로 조례의 인용 법령조항이 변경되어 그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제3조, 제8조)

○ 법 제71조의2제1항 → 법 제103조의3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549호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본문을 제1항으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서 양성평등 정책 평가 우수부서의 사기진작 등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제23조제2항에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위함.

■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정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사항 반영 (제7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제23조)

▶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550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침대(투매트 별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침대를 (프레임)	일반형 2인용	8,000	2,000	6,000
	일반형 1인용	5,000	2,000	3,000
	서랍형, 평상형, 소파형 2인용	16,000	6,000	10,000
	서랍형, 평상형, 소파형 1인용	12,000	5,000	7,000
유아용 침대	모든 규격 (매트리스 포함)	10,000	4,000	6,000
매트리스 (투매트 별도)	일반형 2인용	12,000	4,000	8,000
	일반형 1인용	10,000	4,000	6,000
	라텍스 2인용	15,000	5,000	10,000
	라텍스 1인용	10,000	4,000	6,000

같은 표 제2호 의자의 효율체계(규격)란에 안마의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마의자	30,000	15,000	15,000
------	--------	--------	--------

같은 표 제3호 장판의 효율체계(규격)란을 “1m³ 당”으로 하고, 스티로폼의 효율체계(규격)란을 “100 l 마대 당”으로 한다.

같은 표 제3호 가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방	여행용(기내용)	2,000	1,000	1,000
	여행용(기내용외)	3,000	1,500	1,500
	골프가방	3,000	1,500	1,500
	핸드백,책가방류	1,000	500	5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와 관련하여 근래에 제조된 신규 대형폐기물 품목을 새로이 등재해 품목을 현실화하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조례 제13조제1항 별표 3 대형폐기물 품목 정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55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m ³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 ³ 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text{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	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p>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p>	<p>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p>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p>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p>
<p>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p>
<p>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p>
<p>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p>

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³)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구청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2022년 3월 1일 일부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각 공유수면관리청(지자체)이 조례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다.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안 제3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5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어 온 재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2021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귀속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21년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이 달성되었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정비기금(일반회계)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재정운영의 실효성 및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 나. 기존 관리·운용 재원은 일반회계로 전환(부칙)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553호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헌혈권장”을 “헌혈권장 사업”으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헌혈 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3(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3. 고등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우체국, 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기관·단체의 장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5(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사망·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7(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8(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9(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구민이 헌혈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및 용어 정비(제1조, 제2조, 제6조)

나. 헌혈추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규정(제5조의2, 제5조의3)

다.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제5조의4 ~ 제5조의7)

라.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8, 제5조의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북구규칙제972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장·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과 실·담당관·과의 사무분장”을 “국장·실장·과장의 직급 및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국·실장,담당관은”은 “국·실장은”으로 한다.

제4조의2는 삭제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 1. 사무분장표(기획감사실) 중 제78호, 제79호를 삭제하고, 제80호부터 제8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0. 공공갈등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81. 협치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2. 청원법에 따른 청원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83.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사무분장표(소통담당관)을 삭제한다.

같은 표 사무분장표(미래전략실) 제1호부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2. 신청사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기발전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4. 미래형 융·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5. 디지털복합문화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6. 도심형 트레블 로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구청장 전략 지시사업
8.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9. 국정, 시정, 구정시책 홍보

10.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
11. 구정 홍보용 필름(슬라이드 포함)제작
12. 북구신문·점자소식지 편집·발간
13. 구 공식 SNS 운영

같은 표 사무분장표(행정지원과) 중 제58호부터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직소민원 관리
59. (사)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같은 표 사무분장표(재무과) 중 제33호 및 제34호를 삭제하며, 제35호부터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행정업무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36.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7. 행정업무의 정보화 개발 및 표준화 보급
38. 정보시스템(전산장비 포함) 도입 및 운영 관리
39. 행정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1. 전산시설의 장비운영 및 유지 관리
42.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43.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44. 정보화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6. 그 밖에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4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 담당관· 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을 “실· 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 중 “실· · 담당관· 과”를 “실· 과”로 하며, 제12조제2항 중 “실· 담당관· 과· 동”을 “실· 과· 동”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실· 담당관· 과”를 “실· 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실· 담당관· 과”를 “실· 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마목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감사실장, 소통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 실장 · 담당관 · 과장"을 " 실 · 과장"으로 하고, "실 · 담당관 · 과"를 "실 · 과"로 하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장 · 담당관 · 과장"을 각각 "실 · 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 · 담당관 · 과"를 "실 · 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본문 제1호 중 “○○실·담당관·과”를 “○○실·과”로 하고, 2호서식 중 “실·담당관·과”를 “실·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실·담당관·과"를 "실·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 · 담당관 · 과"를 "실 · 과"로 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우리 구 장기발전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미래전략실장 직급 정비(제4조의3)

나.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사무분장 정비(별표 1)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북구규칙제97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해 정비하고 기존 규칙은 폐지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북구규칙제974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을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된”으로 하고,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를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 부분 중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을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같은 조 내용 중 “결손결정결의서”는 “정리보류결정결의서”로 하고, 같은 조 “결손처분표”는 “정리보류표”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5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 취소시 이월액 정리”을 “정리보류 취소시 체납액 이월”로 한다.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하고,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그 체납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를”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를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로,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으로 하고, “속행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74조의2제6항”을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목란 중 “□ 결손”을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로 하고, 하단의 참고란 중 “감액·결손은”을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으로 한다.

같은 서식 뒤쪽 중 “징수(감액·결손)”을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로 하고, 하단의 “※ 감액, 결손 결정 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가장 밑에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제목란 중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중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로 하고, 같은 서식 제목 외 내용 중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을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감액/결손”을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불납결손액란”을 “정리보류액/시효완성정리액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갑) 앞쪽 제목란 중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하고, 같은 서식 내용 중 “제106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로 하며, 같은 쪽 하단의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갑) 뒤쪽 제목란 중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의 제목란 중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하고, 같은 서식 내용 중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병)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결손처부여부란”을 “정리보류여부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결손처분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정리보류액”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가목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제1호”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제6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margin-right: 10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style="color: blue;" type="checkbox"/> 정정보류 <input style="color: blue;"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div> <div style="font-size: 48px; margin: 0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lex-grow: 1;"> 결정결의서 </div> </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서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항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도) 구(시·군)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정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뒤 쪽)

내역서

[illegible]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액 통지부**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²)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행일 : 2024년 11월 15일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구·군 []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납기일	수납구분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징수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38 -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정리보류표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시효 완성 정리표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p>「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p>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년 월 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정리
보류액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
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년 월까지 증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세무1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103조의3제 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자격 입증서류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채납처분비					
합계					

끝.

발 신 명 외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제·개정(폐지) 이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으로 법령용어가 변경되고,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455호, 2022. 2. 18.)에 따라 시행규칙 내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령용어 변경사항 정리 (제13조~제16조, 별지 서식)

○ 결손(처분) → 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로 구분

나. 시행규칙 근거법령 조항 변경사항 정리 (제21조)

○ 영 제74조의2제6항 →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

발령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북구훈령제34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 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	부 서 별	직급별		정원	직 렬 별 정 원
합 계				573	
실	기 획 감 사 실	일 반 직	5 급	1	행정1
			6 급	8	행정8
			7 급	12	행정10, 사회복지1, 시설1
			8 급	6	행정6
			9 급	8	행정8
		소 계		35	
실	미 래 전 략 실	일 반 직	5 급	1	행정1
			6 급	6	행정6
			7 급	3	행정3
			8 급	5	행정5
			9 급	2	시설2
		소 계		17	
총 무 국	행 정 지 원 과	정무직		1	정무1
		일 반 직	3 급	1	행정1
			4 급	1	행정1
			5 급	1	행정1
			6 급	7	행정7
			7 급	8	행정7, 사회복지1
			8 급	6	행정6
			9 급	1	행정1
		별정직		3	5급상당 1(비서실장), 7급상당 1(비서), 8급상당 1(비서)
		소 계		29	
	문 화 체 육 과	일 반 직	5 급	1	행정1
			6 급	6	행정6
			7 급	6	행정6
			8 급	4	행정4
9 급			2	행정1, 공업1	
소 계		19			

구분	부 서 별	직급별		정원	직 렬 별 정 원
총 무 국	재 무 과	일 반 직	5 급	1	행정1
			6 급	8	행정5, 행정·방송통신1, 운전1, 전산1
			7 급	8	행정4, 방송통신1, 공업1, 전산2
			8 급	6	행정1, 방송통신1, 운전1, 전산3
			9 급	3	행정2, 방송통신1
		소 계		26	
	세무1과	일 반 직	5 급	1	행정1
			6 급	7	세무7
			7 급	8	세무8
			8 급	5	세무5
			9 급	2	세무2
		소 계		23	
	세무2과	일 반 직	5 급	1	행정1
			6 급	8	세무7, 행정·세무1
			7 급	6	세무6
			8 급	5	세무4, 전산1
			9 급	2	세무2
		소 계		22	
	민 원 봉 사 과	일 반 직	5 급	1	행정1
			6 급	7	행정6, 세무1
7 급			5	행정5	
8 급			5	행정5	
9 급			1	운전1	
소 계		19			

구분	부 서 별	직급별		정원	직 렬 별 정 원
복 지 교 육 국	복 정 책 과	일 반 직	4 급	1	행정1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9	행정2, 사회복지4, 행정·사회복지3
			7 급	9	행정1, 사회복지8
			8 급	2	사회복지2
			9 급	1	행정1
		소 계		23	
	희 망 복 지 과	일 반 직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8	행정1, 사회복지5, 행정·사회복지2
			7 급	11	행정2, 사회복지9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9 급		
		소 계		24	
	교 육 지 원 과	일 반 직	5 급	1	행정·사서1
			6 급	7	행정4, 사서3
			7 급	7	행정3, 전산1, 사서3
			8 급	8	행정2, 전산1, 사서5
			9 급	10	행정2, 공업1, 사서7
		소 계		33	
	주 민 복 지 과	일 반 직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6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1, 사회복지4
			8 급	6	행정3, 사회복지3
			9 급	1	행정1
		소 계		19	
	생 활 보 장 과	일 반 직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8	행정1, 사회복지6, 행정·사회복지1
			7 급	12	사회복지12
			8 급	13	행정1, 사회복지12
			9 급	2	행정2
		소 계		36	

구분	부 서 별	직급별		정원	직 렬 별 정 원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일 자 리 경 제 과	일 반 직	4 급	1	행정·기술1
			5 급	1	행정1
			6 급	8	행정8
			7 급	8	행정3, 행정시설1, 공업2, 해양수산1, 수의농업1
			8 급	5	행정5
			9 급	2	행정2
		소 계		25	
	자 원 순 환 과	일 반 직	5 급	1	행정·환경1
			6 급	8	행정6, 행정·공업1, 운전1
			7 급	6	행정2, 환경1, 공업1, 기계운영1, 운전1
			8 급	5	행정2, 환경1, 운전2
			9급	2	행정2
		소 계		22	
	환 경 위 생 과	일 반 직	5 급	1	행정·환경·보건1
			6 급	7	행정3, 행정·환경1, 환경·공업1, 행정·보건1, 보건·식품위생1
			7 급	7	행정2, 환경1, 공업1, 보건2, 식품위생1
			8 급	9	행정1, 환경2, 공업1, 보건2, 환경·공업1, 보건·식품위생2
			9 급	1	환경1
		소 계		25	
	공 원 녹 지 과	일 반 직	5 급	1	행정·녹지1
			6 급	4	행정1, 녹지1, 행정·녹지2
			7 급	4	행정1, 녹지3
			8 급	4	행정1, 녹지3
			9 급	1	녹지1
		소 계		14	
	토 지 정 보 과	일 반 직	5 급	1	시설1
			6 급	6	행정3, 시설2, 행정·시설1
			7 급	5	행정2, 시설3
			8 급	5	시설4, 행정·시설1
			9 급	2	행정1, 시설1
		소 계		19	

구분	부 서 별	직급별		정원	직 렬 별 정 원
안 전 도 시 국	안 전 총 괄 과	일 반 직	4 급	1	기술1
			5 급	1	행정·시설1
			6 급	10	행정5, 시설1, 공업2, 기계운영1, 행정·방재안전1
			7 급	8	행정2, 시설1, 공업3, 통신1, 전기운영1
			8 급	11	행정2, 시설1, 공업3, 방재안전2, 전기운영2, 방 송통신1
			9 급	2	방재안전1, 운전1
		소 계		33	
	도 시 재 생 과	일 반 직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시설1
			7 급	3	행정2, 시설1
			8 급	5	행정3, 시설2
			9 급	-	-
		소 계		13	
	교 통 행 정 과	일 반 직	5 급	1	행정1
			6 급	10	행정7, 행정·세무1, 행정·공업1, 행정·시설1
			7 급	7	행정6, 시설1
			8 급	11	행정7, 공업1, 운전2, 시설1
			9 급	1	행정1
		소 계		30	
	도 시 관 리 과	일 반 직	5 급	1	행정1
			6 급	6	행정6
			7 급	5	행정4, 시설1
			8 급	2	행정2
		소 계		14	
	건 설 과	일 반 직	5 급	1	시설1
			6 급	6	행정2, 시설3, 행정·시설1
			7 급	10	행정4, 시설6
			8 급	6	시설4, 행정·환경1, 운전1
			9 급	3	시설2, 운전1
		소 계		26	
	건 축 과	일 반 직	5 급	1	시설1
			6 급	6	행정2, 시설3, 행정·시설1
			7 급	4	행정1, 시설3
			8 급	10	행정3, 공업1, 시설6
			9 급	6	행정1, 시설5
		소 계		27	

■ 제·개정(폐지) 이유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구 본청 정원을 일부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서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 구청장의 책무(제2조)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제3조)
-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제4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제5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제6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제7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제8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제9조)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제10조)
-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제11조)

3.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2년 7월 27일 ~ 8월 16일(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우편번호 46504)

2) 연락처 : ☎ 051-309-4485, FAX 051-309-4489,

E-mail : deerfire1@korea.kr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생협약의 체결을 권장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 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21.12.31.)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2. 1. 13.부터 시행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우편번호 46504)

2) 연락처 : 전화 051-309-4036, 팩스 051-309-4019, 전자우편 ykh3239@korea.kr

※ 이 조례의 폐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란에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입법예고내용	의견	비고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개정사항(2021. 12. 21.) 반영, 조문 정비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조문 체계를 갖추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확대하고자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안 제9조)
- 나. 상위법의 약칭 추가 및 인용조항 정정 등 조문 정비(안 제2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호)
- 다.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근거 마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33(구포동)(우편번호:46504)

2) 연락처 : ☎ 051-309-4425, FAX 051-309-4529,

E-mail : wndi785@korea.kr.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복지포인트”를 “복지수당 등”으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처우 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 ----- <u>법 제3조제4항</u>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처우 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 개선 등 사업)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u>복지포인트</u> 지급	2. ----- ----- <u>복</u> <u>지수당</u> 등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u>신설</u>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u>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처우 개선 등 사업에 관한

<p>〈<u>신 설</u>〉</p> <p><u>제9조 (생 략)</u></p>	<p><u>사항</u></p> <p>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p> <p><u>제10조(포상)</u>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u>제11조</u> (현행 제9조와 같음)</p>
---	---